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손질

도, 12년 만 전면 개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투자이민 기준 금액 5억→15억으로 상향 조정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도 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여년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견인했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부동산 투자 영주권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정책시행 후 이번에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3배 상향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는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재)한국 자치경제연구원 등이 수행한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2월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승인을 받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목적 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비자(F2)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는 우선 외국인들이 제주의 환경과 관광·교육 측면을 선호하고 있고 최근 콘도 등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투자자 국적을 중국 일본에서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전면 개편이 외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진전이 없자 투자유인책으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활발한 진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국제·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잡식,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산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자로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대상 지역을 중전 관광단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만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제 조치로 도내 콘도 분양건수는 2013년 667건에서 2017년 33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거주 비자 발급건수도 2013년 308건, 2014년 556건, 2016년 136건, 2017년 33건 등으로 줄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지역은 현재 제주와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 뿐"이라며 "향후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찌르레기들의 만찬 18일 제주시 한경면 용당리 한 가정집 정원에 붉은부리찌르레기들이 잘 익은 피라칸타 열매를 쪼아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다. 강희만기자

감귤 신품종 3종 도 전역서 실증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8억5300만원을 투입해 감귤 신품종 육성과 재배법 확립, 농가 실증·보급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2018년부터 감귤 신품종 ▷11~12월 연내 출하 용 만감류 '가을향' ▷12월 수확 가능한 고당도 만감류 '달코미' ▷1월 수

확 가능한 만감류 '설향' 등 3종을 개발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가을향' 등 3개 품종에 대해 도 전역 40여 농가(5~10ha)에 대해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적응성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국민권익위 주관 평가서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부패방지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여려는 제도다.

제주도는 연도 별로 2016~2018년 2등급, 2019~2020년 각각 2등급, 2021년 1등급을 받았다.

2021년도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74개 공공기관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간 추진한 반부패 정책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김승철 제주자치도 소통령신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24일 국회로

정부, 지급 대상 320만명·지급액 300만원 제시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 대해 추경안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그동안 정부지원 사각지대

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들까지 겨냥한 추경이 돼야한다"며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은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하고,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사실상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켜왔던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번에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11
18일 <17시 기준> 누적 4911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장문화를 선도하는 월자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지키며,
제주도민을 위한 희망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ORLDJA
(주)월자포장 | (주)월자제지

RECYCLED
Paper made from recycled material
FSC® C160992
WORLDJA PAPER CO., LTD.

국제삼림관리협회의 인증기업

(주)월자포장은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린한 원료로 제작한 원자를 사용합니다.